

대한민국의 中都, 대전광역시를 말하다

- ❖ 일 시 : 2011년 8월 22일(월) 14:00
- ❖ 장 소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401호
- ❖ 주 최 : 중도일보, 대전발전연구원
- ❖ 주 관 : 배재대학교 자치여론연구소

《 순 서 》

개회식(14:00-14:30)

- ❖ 개회사 : 김원식 사장(중도일보)
- ❖ 환영사 : 김영호 총장(배재대학교)
- ❖ 축 사 : 염홍철 시장(대전광역시)

세미나(14:30-17:00)

- ❖ 좌 장 : 최호택 소장(배재대학교 자치여론연구소)

□ 제1주제

- ❖ 주 제 : 60년전 중도일보가 지향했던 ‘중도’ 의 비전
- ❖ 발표자 : 조성남 주필(중도일보)
- ❖ 토론자 : 안정선 교수(공주대학교)
차재영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성기훈 상임고문(중도일보)

□ 제2주제

- ❖ 주 제 : 60년 후 신중심도시 대전이 지향하는 비전
- ❖ 발표자 : 조욱형 실장(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 ❖ 토론자 : 박정현 의원(대전광역시의회)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대전발전연구원)
조만형 교수(한남대 행정학과)

만찬(17:30-)

60년 전 중도일보가 지향했던 ‘中都’의 비전

조 성 남 <중도일보주필>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1
II. 중도일보의 창간 정신으로의 ‘中都’의 의미	4
III. 지역적 가치를 내세우고 수도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中都’의 표방	9
IV. 21세기 신중심도시 대전의 비전과 중도의 지향점 ..	14

I. 들어가는 말

비전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자 '실천의지'라고 할 수 있다. 맥루한의 지적처럼 미디어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본다면 어떤 매체를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의해 그 매체의 성격과 영향력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독자에게 사시(社是)를 통해 저널리즘의 비전과 메시지를 보여주고 매일 매일의 지면을 통해 비전과 메시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전달한다.

대전·충청지역의 대표적인 정론지(正論紙) 중도일보가 올해로 창간60주년을 맞았다. 「엄정중립(嚴正中立)」, 「신속정확(迅速正確)」, 「지역사회개발(地域社會開發)」에 앞장서는 신문을 사시로 한 중도일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1일 공보부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번호 39호) 1951년 8월 24일에 창간했다.¹⁾

당시 창업주인 故이웅렬(李雄烈) 회장은 한국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창간을 서둘렀고 51년 8월 24일 창간호를 냈는데 타블로이드 크기의 마분지였다.²⁾

1) 1971중도연감, 중도일보사, 409-410쪽, 1971.3.20

2) 중도일보, 지역사랑50년(20면)특집, 2001.9.1자.

2001년 9월 1일자 중도일보 창간50주년특집기사에 따르면 창간당시 중도일보는 “압록강에서 제주도까지 그 중심이며 신도시로 넉넉한 터전을 지닌 대전에 ‘중도(中都)를 건설하자’는 기치를 내걸었다. 8·15해방직후의 혼란기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도(首都) 서울이 아닌 대전의 지방신문이 대전을 국토의 중심지를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은 6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금강시대를 내다보고 수도를 대전에 건설하는 것을 하나의 비전으로 설정한 것은 물론 당시 지역개발이라는 의식이 전무하던 상황에서 지역사회개발을 신문의 사시로 들고 나왔다는 점 또한 선각자적 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시는 이후 지난 60년 동안 대전·충남지역의 지역개발과 그 맥을 함께 해오는 것으로 증명됐다.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중도일보가 지역민들에게 보여준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60년 전 중도일보가 지향했던 ‘중도’의 비전과 꿈을 되돌아보고 21세기 신중심도시 대전이 지향하는 비전과 연관 짓는 작업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지난 2009년 대전은 市가 된지 60년이 되면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인근에 행복도시가 건설되면서 대전은 국토의 신중심도시로 부상되는 호기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하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중도’로

서의 대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는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본고는 60년 전 중도일보가 지향하고자 했던 '중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해보고 21세기 대전의 미래상과 지향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³⁾

3) '중도'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는 데는 다소 필자의 주관적 해석도 들어가 있겠으나, 중도일보 사시의 큰 테두리 속에서의 주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중도일보 창간 정신으로서의 '中都'의 의미

60년 전 창간당시의 중도일보 사시의 앞머리가 「엄정중립」으로, 이는 중도일보가 언론으로서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자칫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나라 사회풍토 속에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언론으로서의 자세를 시사한 것이다. 얼핏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로 폄하될 수도 있는 가치를 사시로 내걸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감안한다면 중도(中道)로서의 중립(中立)을 표방한다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8·15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정국은 혼란 그 자체였다. 남·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통치되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했고, 남·북한 모두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정파세력간 분열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와 이념은 흑과 백, 좌와 우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웠고, 그 와중에 국민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양극단만이 판을 치는 세태 속에서 국민들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런 와중에 동족상잔의 6·25가 터졌다.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극한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세대가 중도일보 창간이념을 ‘중도(中道)로서의 엄정 중립’으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아울러 여기서 ‘中’의 개념은 조선조 500년간 국가이념으로 지켜왔던 유교(儒敎)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 前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정옥자 서울대명예교수는 진정한 중도란 좌우의 중간지점이 아니라 화합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통시대에 가장 존중된 가치인 화합의 정신은 「중용(中庸)」의 중화(中和)논리에 기초한다고 보았다.⁴⁾ 정교수는 중화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균형 감각이며 적중(的中)이 필요조건으로 어떤 상황에 부닥치거나 무슨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과녁을 딱 맞히듯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중의 정신이 중화라고 주창한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균형감각을 지닌 가치가 ‘중(中)’이며 중도는 ‘원칙과 상식’에 바탕한 정신이라는게 정교수의 ‘中’에 대한 해석이다. 좀 더 자세히 유교의 중화(中和)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역학자이자 홍역사상 연구소장인 이응국씨에 따르면 유가의 四大經書중 하나인 ‘中庸’에 ‘致中和면 天地位焉하며 爲物育焉이니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중화에 이르면 천지가 바로서고 만물이 길러진다’는

4) 정옥자, 「한국의 리더십 선비를 말하다」 112쪽, 문이당, 2011.

것으로 이소장은 중화(中和)가 유교의 핵심사상임을 말해주는 근거라고 지적한다. 이어 2장에 ‘仲尼曰 君子는 中庸이요 小人은 反中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仲尼는 공자를 가리키는 말로 공자 스스로 군자는 중용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 중용의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고 주창했다. 이소장은 이 같은 공자의 중용사상은 유가의 가장 핵심사상이며 그 연원은 요순시대로부터 연원한다고 강조했다. 나무로 비유하면 ‘中’은 뿌리를 튼튼히 해주는 사상이며 ‘和’는 가지를 무성하게 북돋워주는 이념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치세의 근본이 바로 이 ‘中’에서 나왔다고 이소장은 보고 있다.

5백년을 지탱해온 조선사회의 가장 핵심가치가 ‘中和’라는 해석을 보면서 필자는 중도(中道)의 가치가 60년 전 한국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선의 가치이자 이념이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독자들에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지닌 시국관을 제시해 주는 신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은 60년이 지난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유용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1세기의 한국사회를 되돌아보자. 경제교역면에서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내부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극화의 위기 앞에 불안한 나날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앞에 지방

자치단체의 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삶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에는 사람이 너무 몰려 이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고 지방은 그 반대현상으로 타개책모색에 부심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⁵⁾ 소득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이 점차 줄어들고 하위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서기가 힘들어지면서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정치권의 복지논쟁은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와 함께 한국사회는 아직도 이념면에서 대립양상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논쟁은 그 단적인 사례다. 유신독재시대를 거쳐 80년대의 6·29선언으로 이어지는 매카시적 정치풍토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민주세력의 성장이 두드러진 우리 사회의 정치지형은 진보와 보수의 두터운 벽을 형성했다. 이 진보와 보수의 벽은 정치적 정파의 산출은 물론 국민의 정치의식까지 잠식해 사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첨예하게 갈려 국론의 분열을 가져왔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진보와 보수를 완충하는 중도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항상 흑과 백, 좌와 우, 진보와 보

5) 행복도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적 노선대립은 그 좋은 사례에 속한다.

수라는 명확한 경계선만을 설정한 채 중도세력은 회색분자나 기회주의자로 치부돼왔다. 이런 관점에서 60년 전 중도일보가 엄정중립을 사시로 내세우고 유교의 핵심가치인 '中'을 실현코자 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용기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도 아직 유용하다고 하겠다.

중화의 가치에 입각한 중도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 형국의 길을 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도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돼야 할 것이다. 중도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Ⅲ. 지역적 가치를 내세우고 수부도시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中都'의 표방

중도일보의 선구자적 혜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사시로 제시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는 신문」을 꼽을 수 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지역사회개발은 너무도 당연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상황에서 지역사회개발은 용기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창간당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조차 어려웠던 상황에서 지역사회개발을 신문창간의 가치로 내걸었다는 것은 놀라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역사회개발의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한 것이 '농협'의 탄생이었다.⁶⁾ 당시 충남의 산업기반이 농업이었고 농업의 발전 없이 지역개발은 '공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956년 9월, 2회에 걸친 '농업금융이 절실하다'는 시리즈기사는 그 후 충남농협탄생의 길을 연 선각자적 업적으로 이어졌다.

1950년대까지는 이승만 치하에서 지방자치제도가 그래도 이름만이라도 실시되고 있었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6) 중도일보 2001년 9월 1일자 20면 인용

이 일어나면서 지방자치는 전면 백지화된다. 5·16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등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는 소멸되고 강력한 중앙정부 통제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은 읍·면 중심의 자치제를 폐지하고 대신 군자치제를 규정했다.

또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특별시장·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특별시는 내무부장관, 시와 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는 일반사람들의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61년부터 1988년까지 약27년 동안 지방자치는 긴 동면에 들어갔고 대신 국민들의 머리에는 중앙집권의 강력한 힘이 지배하는 의식구조가 자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중앙집권의 권위주의 속에서 지방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개발을 표방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풍토 속에서는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결단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중도일보는 1960년대에 이 같은 작업을 중도일보 간판 옆에 붙여놓고 공개적으로 나섰다. 그때 내세웠던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정부청사대전유치추진위원회·충청지역개발협회·계룡산국립공원개발협회·금강주류-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충무체육관건립추진위원회·농민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대천선-조판선-대전공작창유치추진위원회·충청남도

종합개발추진위원회 · 대전교육대학설립추진위원회 · 대전고법-고검추진위원회 · 대전공업단지추진위원회 · 대전천도추진위원회 · 서해안조력발전추진위원회 · 비인임해공단추진위원회 · 충청은행추진위원회 · 아산만지역개발공사 등」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협회와 추진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중도일보가 가장 핵심가치로 지역개발을 추진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중도일보의 지역개발은 그 후 하나하나 결실로 이어진다. 1961년 '충남대 국립기관을 조속히 실현하라'는 사실이 실렸고 1967년 7월 22일과 23일에는 정부청사대전 유치와 대전고법유치를 촉구하는 기사가 잇달아 게재됐다. 대전고법은 25년 만에, 정부대전청사는 3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충청은행과 충무체육관 건립 역시 중도일보의 주장이 현실화된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1967년 당시 이용렬 중도일보사장은 발기인 대표를 맡아 지역 경제인을 규합하며 지방은행설립에 나섰다.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설립을 늦춰야 했다. 그러나 이사장은 당시 김종희 한국화약대표와 최준문 동아건설산업회장 등 충청지역출신 재경실업인들의 주식인수를 이끌어내며 68년 2월 창립총회를 연 뒤 같은 해 4월 22일 역사적인 향토은행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66년 추진위를 구성해 지역민들로부터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의 노력으로 충무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중도일보의 지역개발은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오늘날 대전·충남지역의 발전상으로 이어지는 디딤돌로 작용했다.

중도일보의 지역개발·지역사랑은 비단 개발 사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화 사업에도 그 명맥을 지속했다. 1966년 개막된 전국적인 규모의 백마영화제는 7년 동안 계속됐는데 당대의 스타들이 모두 이 영화제에서 이름을 날렸다. 또 백마가요제와 학생문예공모전을 통해 당시로서는 등용무대가 흔치 않았던 문화계의 신인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도일보는 지역문화 창달에도 기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개발사업과 함께 지역민의 눈길을 끄는 것은 「대전천도위원회」라 할 수 있다. 중도일보 창업주인 故이웅렬 회장은 대전이 압록강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우리 국토의 중심이며 신도시로 너넉한 터전을 지닌 중도(中都)를 건설하자는 그의 창간철학을 제호로 담은데 이어 대전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그의 발상은 그 후 박정희대통령의 행정수도로 이어졌고 정치권에 수도이전 논쟁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1990년대 정부대전청사가 건립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이 대전천도주장은 노무현대통령의 지방분권과 행정수도론으로 계승돼 행복도시로 그 결실을 맺게 된다.

60년 전 지역의 한 신문이 주창한 지역사회개발과 수도이전 주장은 당시로서는 위험한 모험이며 치열한 도전정신이

아니고서는 힘든 발상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대전·충청의 발전상으로 계승되었지만, 중도일보는 중앙집권적 정치풍토에 도전하는 이단아로 인식돼 '1道1社정책'이란 언론탄압의 철퇴를 맞게 되고 1973년5월 24일 그 이름을 접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선구자는 그만큼 어려운 길이며 그 평가는 후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중도일보 사례에서도 입증된 셈이다. 세종시가 건설되는 지금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도일보가 주창한 '중도(中都)'의 이념과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은 누구나 주장하고 공감하는 지방자치, 지역개발이지만 60년 전, 50년 전의 시대 속에서는 감히 내세우기 어려웠던 가치였다. 그런 역사적 배경과 중도일보의 그간의 노력은 이제 새로운 시대적 흐름 앞에 재탄생돼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생각이다. 과거의 지역개발이 지역의 생존을 위한 개념이었다면 21세기 지역개발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청을 국토의 핵심지역으로 부상시키는 아젠다로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전은 21세기 신중심도시로, 충청은 한강시대를 넘어 금강시대를 여는 그런 21세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중도일보의 지역적 가치와 '中都'의 표방은 새롭게 재정립돼야 한다는 요구 앞에 서 있다.

IV. 21세기 신중심도시 대전의 비전과 중도의 지향점

21세기 대전은 세계도시를 꿈꾸고 있다. 도시의 시대,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제 대전은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향한 몸짓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대전이 세계적인 도시로 진입하려면 이미 세계적인 도시가 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구비해야 한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경제적 여건을 비롯한 범죄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존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환경과 높은 문화수준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없다.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로 그 이름을 떨치는 도시들-뉴욕,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상해-의 대부분이 일자리와 문화적 수준, 환경과 안전이 구비된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에는 정주민뿐 아니라 매일 전세계에서 수많은 사업가와 관광객이 찾아와 번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21세기 대전이 신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대전은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대덕특

구를 끼고 있어 경제적 잠재가치가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인근에 3군 본부와 세종시를 끼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견해도 만만치 않다. 세종시가 대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KTX 등의 교통수단이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빨대효과로 작용해 지방의 피폐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결국 21세기 대전이 새로운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도,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그 실현여부는 전적으로 대전지역사회 구성원의 몫이라 하겠다.

흔히 지역사회는 지역민을 필두로 관·학·연·언·시민단체로 이루어지며 언론의 경우 그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場)'으로 작용한다. 언론은 그 기본적인 사명이 비판과 건전한 여론조성이지만, 그 소속된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지방신문은 그 지역과 맥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일본의 지방신문이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과거 지방자치의 착근에 지방신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이 신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대전사회의 언론, 특히 지방신문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60년 전 지역사회개발을 사시로 내걸었던 중도일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유교의 치세의 근본인 중용의 미덕과 지방자치의 핵심가치

인 지역사회개발을 60년 전 비전으로 제시했던 중도일보는 이제 신중심도시로서의 터전을 여하히 만들어나가야 하느냐의 아젠다 설정의 중심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시민은 물론 관과 학, 연구소와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신중심도시 대전의 공통분모를 산출해 내는데 중도일보가 ‘공론의 장’으로 제공돼야 한다. 더 나아가 대전 시민들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믿고 의지해나갈 수 있는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며 대전이 세계적인 신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반 구비여건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독자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독자들과의 쌍방향성 의사소통이 관건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강용기. 2008. “개정판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 정옥자. 2011. “한국의 리더십, 선비를 말하다”, 문이당
- 조성남. 2005. “지방정부의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대전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중도일보사. 1971. “1971중도연감”
- 중도일보. 충남발전협의회. 2005. “이제는 금강시대다”
- 중도일보 신문 및 홈페이지
- 한기범. 2003. “행정수도”, 하늘출판사

60년 후 신중심도시 대전이 지향하는 비전

조 옥 형<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 목 차 -

I. 신중심도시 대전의 부각	19
II. 신중심도시의 의의	21
III. 대전이 풀어야 할 선행과제	23
IV. 신중심도시 대전의 미래	25
V. 대전의 도전	29

I. 신중심도시 대전의 부각

<기존의 중심요소>

- (과학의 중심)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역량과 파급력 보유
 - 1970년대부터 연구개발 노하우와 성과물이 축적되어 있고, 29개 정부출연 등 73개 연구기관에 약 15,00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대덕특구가 입지한 대전
 - 현재 정부 R&D투자의 27% 정도가 대덕특구에 집중되고 있음.
- (행정의 중심) 정부대전청사, 교육·군수사령부, 3군 대학 등 위치
 - 1997년 12월 입주한 정부대전청사에 11개 중앙행정기관, 4,1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교통의 중심) 전국 어느 곳이든 반나절(4시간)에 접근 가능한 교통여건
 -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철도와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중부권의 교통 요충지로 성장해 옴.

<새로운 중심요소의 등장>

- (세종시) 2012. 7. 1 국가행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계획 도시인 세종시 출범
 - 2012년부터 16개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의 이전 시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기반 구축의 거점지구 지정
 -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II. 신중심도시의 의의

□ 편중(偏重)의 개념이 아닌 집적(集積)의 개념

- 편중은 가치를 창출하는 구성요소들 간의 일관성(목표 지향적인)과 연계성이 약한 단순한 밀집이며, 주로 중심부와 주변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취함.
- 반면, 집적은 생산요소들 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부가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클러스터 개념으로서 주변과 중심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음.
- 우리나라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이 편중의 개념에 입각한 불균형 이론의 사례라 할 수 있고, 어느 수준까지의 성장 전략은 될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 센터(center)의 개념이 아닌 허브(hub)의 개념

- 센터는 단순히 주변부와 구별된다는 정(靜)적인 의미로 주변부와의 상호작용이나 소통에 대한 요소는 고려되지 않음.
- 허브(hub)는 주변부와 활발한 쌍방향 네트워크를 통해 투입과 산출, 흡입과 확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역동성, 지속적 자기 혁신 추구라는 동적인 의미임.
- 주변부의 가치를 중심으로 흡수만 하는 일방통행 소통의 센터개념과 달리 허브개념은 가치의 수렴과 파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양방향 소통임.

□ 공간(space)의 개념이 아닌 역할(role)의 개념

- 공간적인 중심은 지리적인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전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라는 논리가 이에 해당함.
- 그러나 신중심은 지방자치 이념에 바탕을 두고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함.
- 따라서 다른 도시의 발전모델로서 다양한 성장가치들을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의 중심지가 바로 신중심이라 할 수 있음.

Ⅲ. 대전이 풀어야 할 선행과제

- (지역경제) 경제의 파이를 키워줄 수 있는 대전만의 특성화된 성장동력 부재와 전통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 대전의 GRDP는 2009년에 21조 6800억원으로 전국대비 2.17%이나 매년 그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 2004년(2.34%) ⇨ 2006년(2.27%)
 - GRDP 생산구조 중 제조업 비중은 14.29%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77.65% 차지
 - 현재 대전의 특화된 산업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이끌어 내는 시스템에 있어 정부의 국가산업 육성계획에 선제적인 대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도시개발) 지역발전의 동서불균형과 신규 개발용지 부족
 - 세종시, 과학벨트 등 대형 개발요인이 대전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동구, 중구, 대덕구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운 현실임.
 - 시 권역 내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부족으로 산업용지 확보도 어렵고 세종시, 과학벨트로 인한 지가 상승도 도시 (재)개발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 (도시문화) 공급자 중심 문화예술 정책과 브랜드 축제 부재
 - 문화예술 소비계층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문화 예술의 공공예산 의존도가 높고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창작활동이 활발하지 못함.
 -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표축제 발굴이 시급함.

- (시민복지) 갈등요인의 증가와 삶의 질의 기대수준 상승
 -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지속적 증가,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 생애주기별 공공지원에 대한 요구 급증 및 개인적 가치의 부각에 대한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IV. 신중심도시 대전의 미래

<대전 비전의 방향>

- 21세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대덕의 기적」 실현
 - － 최고의 과학과 문화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형 산업도시」 지향
 - － 대덕특구와 과학벨트의 연구개발 성과에 바탕을 둔 첨단 제조업과 특성화된 MICE산업이 대전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 광역 대전생활권 형성으로 「제2의 수도권」 도약
 - － 세종시 등 G9과 비전을 공유하며 상생 발전하는 「중부권 수부도시」로 부상
 - － 인접지역과의 단일 경제권(생산-소비) 형성 및 생활행정 서비스의 통합

- 시민 개개인의 삶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 조성
 - － 다양성, 형평성, 공공성에 입각한 사람 중심의 「휴머니즘 도시」 추구
 - － 가치의 다원화와 계층·지역간 균형발전, 상식과 순리의 도시 문화 확산

<대전이 지향하는 미래상>

□ (경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역동의 공간

－ 과학벨트의 기초과학 성과가 응용과학, 기술사업화로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함.

－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장치산업(process industry)이 아닌 첨단 소재와 부품, 핵심기술을 생산·공급하는 첨단제조업의 메카로 발돋움

※ 대전에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강소기업이 200개 정도 증가를 목표

－ 대덕포럼이 과학계의 다보스포럼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국제 회의, 전시회가 개최되는 등 MICE산업을 기반으로 서비스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기술투자·사업화, 지적재산 관련 전문 지식서비스기업이 대전에 밀집함.

□ (문화) 문화예술의 시작과 마무리가 펼쳐지는 창조의 공간

－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문화향유 및 소비계층이 형성되어 다양한 전시·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예술인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됨.

※ 대전은 전국에서 보헤미안지수(bohemian index)가 가장 높은 도시로 성장

-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국악전용극장 등이 밀집한 갑천변 문화예술구역과 중앙로 창조의 거리가 대전의 특성화된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유명해짐.

※ 세계적인 공연, 전시가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경우가 많아짐.

- HD드라마타운, 다양한 특수효과 시설 등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의 후반부 작업이 대전에서 펼쳐짐으로써 영상특수기술의 산실로 부각

□ (사회) 차별과 편견이 없이 시민 모두에게 가능성을 열어 두는 기회의 공간

- 개인 맞춤형 장애인 자활지원과 고용확대를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 최고를 유지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 장애요소가 없는 도시를 구축함.

※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 구현

- 한 발 빠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로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각 분야의 해외교류가 양적, 질적으로 활성화 됨.

- 복지만두레가 우리나라 대표의 시민참여형 복지모델로 자리 잡고, 완전한 의무교육의 실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모범도시가 됨.

-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충전의 공간
 - － 분야별 기능과 역량의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대학·연구기관·기업 간의 연계, 금융·법률·컨설팅의 일괄 처리화 등 대전에서 모든 것을 해결 가능
 - － 도시의 기능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과 집중투자를 통한 도시균형발전 성취
 - － 도시철도와 국철을 근간으로 시내버스, 자전거도로가 연계된 대중교통으로 20분 만에 녹색, 문화, 휴식공간에 도달
 - － 재난재해에 대한 위기관리체계, 시민건강증진 및 응급의료체계, 방범체계 등 시민안전에 대한 접근시스템이 통일되고 정착됨.

V. 대전의 도전

□ 도시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 도시가 비록 생명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유기체와 같이 발생, 성장, 그리고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줌.
- 도시가 특정한 기업(산업)에 의존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그 기업(산업)의 존폐에 운명을 맡겨야 함.
 - ※ 미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이었던 디트로이트의 영광과 쇠퇴를 주목해야 함.
- 대전이 지향해야 할 도시비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역량을 가진 창조형 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

시민 모두가 잘 살고, 각자의 꿈을 실현하며, 세계화 흐름에 동참해 나가는 대한민국 新중심도시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 경주

- (인적자본을 중시하는 도시)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성공하는 도시로 인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대전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 교육투자 확대, 각 분야의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창조산업·공간 확충

- (즐거움을 주는 도시) 전시와 공연, 레스토랑과 커피숍과 쇼핑몰, 유흥시설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함.
 - ※ 시민을 하나로 결집하고, 도시에 애정을 갖게 하는 상징 (문화) 개발
- (공공디자인을 잘하는 도시) 거리의 벤치, 보도블록, 가로등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녹색공간이 많아야 함.
 - ※ 작은 것이라도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추구
-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 대전처럼 밀집한 도시에서 대중교통은 도시내부를 연결하는 소통의 길이자 다양한 가치들이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함.
 - ※ 교통수단 간의 환승 강화, 대중교통의 신뢰성(서비스, 정시성) 제고